

중앙정부 권한 더 내리고 '지방시대' 활짝

- 7월 14일(금) 14개 부처 참석, 중앙권한 지방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회의 개최
- 국민체감형 신규과제 지속 발굴로 지방이양 추진동력 강화
-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, 비수도권 공립대학 정원·학과 조정 등 사도 권한 확대
- 지방항 항만배후단지 개발·관리,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 등 중앙권한 지방이양 법령개정을 속도감있게 추진, 빠르면 연내 시도 이양

□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(6월 12일),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(7월 10일) 등을 계기로 그동안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, “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”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전망이다.

□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(금)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, 산업부, 해수부, 고용부 등 14개 관계부처 실·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창섭 차관 주재로 「중앙권한 지방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 회의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○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 지자체의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 아래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.

○ 이번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67개 과제*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, 각 부처가 지방이양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* '23.2.10.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된 57개 과제, '22.12월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 권한 지방이양 TF에서 확정된 10개 과제 등

□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결과 총 67개 지방이양 과제 중 56개가 연내 법령 제·개정 등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어 속도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부처별로는 국토부 과제가 20개, 산업부 12개, 고용부 6개, 환경부 5개, 교육부·문체부·해수부 각 4개 등으로, 국토·산업·고용 등 핵심 분야의 지자체 결정권 보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구체적으로,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, 비수도권 공립대학 정원·학과 조정, 자유무역지역 지원사업 기획·운영에 관한 권한이 사·도로 이양되었으며,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범위도 대폭 확대*되었다.

*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(30만㎡→100만㎡)

- 지자체에 위임되는 농지전용 허가 권한 범위를 확대*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를 완료(6월 26일)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.

* 시도에 위임된 12개 지역지구 농지전용 허가 권한을 14개로 확대(지역특구, 연구개발특구 추가)

- 해수부의 지방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·관리권, 마리나 항만 관리규정 변경요청권은 물론 교육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 등도 올해 상반기에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빠르면 연내에는 시도지사에게 중앙권한을 넘기게 될 전망이다.

□ 지방이양 과제발굴과 추진에 참여한 지자체들은 중앙사무 이양을 통해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지역특화 발전과 개발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□ 행정안전부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하여 실질적인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성과를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규 이양과제를 지속 발굴하는데 지자체는 물론 부처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.

○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“환경·국방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중앙의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사례와 같이 과감한 이양 시책이 지속 발굴되어야 한다”고 강조하면서, “지자체가 스스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해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 발전 시대를 열어 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지방자치균형발전실 자치분권지원과	책임자	과 장	허승원 (044-205-3321)
		담당자	사무관	임지윤 (044-205-3325)

□ 추진 배경

- 중앙지방협력회의 보고('23.2.10) 및 규제권한 지방이양 TF 확정('22.12.)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과제(67개*) 상반기 실적을 점검하고자 함
* 57개 과제(중앙지방협력회의 보고) + 10개 과제(규제권한 지방이양 TF 확정)

□ 회의 계획

- (일시/장소) '23.7.14.(금) 14:00~15:00 / 정부서울청사 회의실(1217호)
- (참 석) 행안부 차관 주재, 14개* 관계부처 실장 참석
* 국토부(20개 과제), 산업부(12개 과제), 고용부(6개 과제) 등
- 주요 논의 내용
 - 각 부처별 지방이양 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
 - 지방분권 주요 정책 추진현황 설명
 - 제2차 지방이양일괄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, 신규 국민체감형 지방이양 과제 추가발굴, 우수사례 확산 등 협조 당부

시간		주요 내용	비고
14:00~14:02	2'	▶ 개회 및 회의 안내	
14:02~14:05	3'	▶ 인사말	행안부 차관
14:05~14:45	40'	▶ 각 부처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 (부처별 3분 내외)	부처별 실장
14:45~14:55	10'	▶ 지방분권 주요 정책 추진현황 설명	자치분권지원과장
14:55~15:00	5'	▶ 마무리	행안부 차관
15:00		▶ 폐회	

□ 추진배경

- 지자체가 스스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, 지역경제 활성화 및 특화발전 도모

□ 추진경과

- 자치단체 수요조사('22.7.22 ~8.5.), 전문가 검토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(~'22.9.8.)
- 국조실·행안부·기재부 합동 TF 주관, 관계부처 조정회의('22.11.~12.)
* 총 25개의 규제권한 지방이양 또는 제도개선안 마련
- 중앙지방협력회의 「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*」 안건 상정('23.2.10.)
* 6개 분야(국토·산업·고용·교육·복지·제도) 57개 과제
- 행안부 중심, 지방이양 과제 추진상황 점검 등 후속조치 추진(67개*)
* 57개 과제(중앙지방협력회의 보고) + 10개 과제(규제권한 지방이양 TF 확정)

□ 과제현황

- (부처별) 총 67개 과제 중 국토부 소관 과제가 20개, 산업부 12개, 고용부 6개, 환경부 5개, 교육부·문체부·해수부 각 4개 등
- (유형별) 법령 제·개정 과제 55개, 자체 제도개선 과제 12개
- (시기별) '22년 3개, '23년 56개, '24년 7개, 중장기 1개

《 6개 분야 주요 과제 》

	분야	과제
1	국토농림(16개)	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,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등
2	경제산업(28개)	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, 국가산단 유치업종 변경권한 등
3	고용(8개)	외국인력 도입규모 지자체 참여 강화, 일자리 대책 수립·집행 권한 등
4	교육(4개)	지역대학 재정지원권한, 경제자유구역 內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 등
5	복지문화(7개)	농어촌 보건진료소 승인권, 대중골프장 지정권 등
6	제도(4개)	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, 지방이양 성과평가체계 구축 등

참고 2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과제 중 상반기 성과사례

1 시도로 권한 이양 완료 사례

○ 법령 개정을 통한 시도 권한 범위 확대 완료

	과제명	주요 내용	부처
1	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	【현행】 ①30만㎡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시도 지사에 既위임, ②권역별 해제가능총량 내에서 해제 가능 【개선】 ①비수도권 지자체의 해제권한 확대(30만㎡→100만㎡), ②반도체·방산·원전산업 등 국가전략사업 추진 시 해제총량에서 제외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('23.6.13) 및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('23.4.21) 개정 완료	국토부

○ 계획 변경 등 신속한 개선을 통한 권한 이양 또는 권한범위 확대 완료

	과제명	주요 내용	부처
1	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 지역참여 확대	【현행】 중기부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전환 자금을 지원 【개선】 지자체 추천기업 대상으로 진단·컨설팅 우선배정하도록 구조혁신 지원사업 공고 ('23.2.13.) → 지자체 추천기업 진단·컨설팅 우선배정 및 자금지원	중기부
2	자유무역지역 지원사업 기획·운영 권한	【현행】 산업부가 자유무역지역 지원사업 기획·운영 【개선】 '23년 경쟁력강화사업 시행계획에 시도지사가 직접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 변경 ('23.3.9.) → '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' 개정과 동일한 효과 발생	산업부
3	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권한	【현행】 산업부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지원 주도 【개선】 시도가 자율적으로 발전단계 결정 및 2단계를 선택한 시도에 육성사업 기획·평가·관리 권한 부여하도록 산자부 고시 개정 완료 ('23.2.13) * ▲(1단계) 국가 주도 육성 ▲(2단계) 지자체 자율 육성	산업부
4	비수도권 공립대학의 정원 및 학과 조정	【현행】 교육부가 공립대학 정원 학과 조정 등 사전승인 【개선】 비수도권 공립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 정원 조정 및 학과 신설·폐지 등 자율 조정 후 사후보고 하는 24년 전문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 수립 ('23.1.)	교육부

2 시군구로 권한 이양 완료 사례

○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권한 이양 완료

	과제명	주요 내용	부처
1	농어촌 보건진료소 설치 승인	【현행】 복지부가 인구 500명 미만인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 설치 시 승인 【개선】 인구 500명 미만 지역 보건진료소 설치 승인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시행규칙 개정·시행 ('23.6.26.) 【성과】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보건진료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의로서비스 접근성을 향상	복지부

3 시도 이양 추진 중인 사례

○ 법령 개정안 발의

	과제명	주요 내용	부처
1	지방항 항만배후단지 개발·관리 권한	【현행】 해수부가 지방관리항만의 항만배후단지 개발·관리기관 지정 【개선】 시도에 지방관리항만의 항만배후단지 개발·관리권한을 이양하는 항만법 개정안 발의 ('23.3.14.) 【기대효과】 지자체 주도 개발·관리로 지역특화된 항만배후단지 조성 및 일자리 창출	해수부
2	마리나항만 관리규정 변경요청 권한	【현행】 마리나항만 관리규정 제·개정 시 해수부가 수리·변경요청 【개선】 시도에 마리나항만 관리규정 수리·변경 요청 권한을 이양하는 마리나항만법 개정안 발의 ('23.3.14.) 【기대효과】 지자체 실정에 맞는 효율적이고 특화된 마리나항만 운영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	해수부
3	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 권한	【현행】 교육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, 과태료 부과 【개선】 시도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, 과태료 부과 권한 등을 이양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교육기관 설립법 등 개정안 발의 ('23.3.6.) 【기대효과】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산학연계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, 지자체의 외국대학 유치 활성화	교육부